

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국세청, '위드 코로나'해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계속

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.

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 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.

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.

또한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,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"상속세 과세자 비율 2.4% 불과...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"

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(기본소득당)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(34만5천290명)의 2.42%에 불과했다.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.

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(10~50%)을 적용해 계산한다. 일괄 공제(5억원)와 배우자 공제(최소 5억원)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,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.

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,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

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"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.

용 의원은 "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"고 지적했다.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.

휘발유 내달부터 1ℓ당 164원↓... 당정, 유류세 20% 파격인하 합의

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·경유·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%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.

ℓ당 휘발유는 164원, 경유 116원,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.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.

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.

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(LNG)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 2%에서 0%로 내린다.

정부는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 후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이밖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,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·계란·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.

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"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"며 "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"고 전했다.

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"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 물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"며 "해외 공급망 다각화나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"고 덧붙였다.